

# 大學의 自由와 教權 그리고 責任\*

玄 勝 鍾  
(翰林大 學長)

우리의 大學은 광복 후 40년간 주로 公權力에 의해 自由와 教權을 침해 당해 왔다. 그것의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당국과 교수 및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의 경주와 함께 그것을 침탈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언동을 삼가해야 한다. 아울러 그것을 침해 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回收하려는 각오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할 것이다.

## 1. 머리말

Alvin Toffler가 분류하였듯이 현대 사회는 後期産業社會이며 頭腦集約的 社會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속해 있는 현대라는 시대는 高速의 社會變化의 시대이다. 思考에 있어서 世代間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적어도 60代 이상과 4·50代와 2·30代의 시대 감각을 달리하는 세대들이 공존하는 多世代時代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시대에 살면서 국제적 경쟁 무대 속에서 21세기를 절머져야 할 인재를 양성해내야 하고 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대학이 지닌 사명은 실로 막중하기 짝이 없다. 더우기 대학은 두뇌

집약적인 知識産業體요, 道義傳統의인 倫理共同體이어야 함에 상도할진대 엄청난 책임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학이 지닌 중차대한 사명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이 향유하여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책임이 따르는 최대한의 自由와 의무를 수반하는 준엄한 教權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自治 없는 대학의 행정은 권력의 시녀로 타락하게 될 것이며, 自由 없는 학문은 주어진 결론의 이론화에 급급하는 데 그칠 것이요, 自律 없는 교육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족과 국가의 광복 후 40년의 세월을 보낸 우리의 大學史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할 것인가? 잠깐 동안의 자유 체제가 없었던 것은

\* 이 글은 大學 自律化 추진을 위한 總·學長 세미나('88.7.28)에서 발표된 基調講演의 내용임.

아니지만 오랜 권위주의의 정치 풍토하에서 대학의 자유는 많은 침해를 당하였으며, 교권은 수없이 유린을 겪어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대학은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은 정부와 학생의 틈바구니에서 헛바퀴만 돌러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6·29 선언 이후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여망은 서광을 비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자유와 교권의 존중도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실현을 볼 수 있는 전망이 서게 되었다. 차제에 과거를 돌이켜 정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새 출발의 계기를 찾아보는 것은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2. 大學의 自由

자유는 대학 존립의 이념적 기반이다. 자유 없는 대학은 생명 없는 신체와 같은 것이다. 자유가 있음으로써 대학은 각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特殊性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학문은 활발하게 진리를 캐낼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은 유용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며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대학의 자유를 만족스럽게는 누리지 못하였다. 많은 유린을 당하였던 것이다. 우선 公權力에 의하여 행정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받아 自治力을 크게 침식 당하였으며, 학문은 정권 유지에 관련되는 한 연구에 제약을 받거나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증용을 받았으며, 때로는 연구 결과의 발표를 억제 당하기도 하였다.

교육은 소위 國策 과목으로 인하여 교양교육의 자유성에 窒束을 받아야 하며 항상 감시를 받는 가운데 강의 내용에는 조심성을 잃지 말아야 하였으며, 학생 지도 내지 학생과의 대화에는 벽을 느껴야 하였다. 대학은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서 무사안일하려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각 대학은 多樣性을 지니지 못하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각 사립대학간 특색의 구별도 희미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각 대학의 독자적인 建學理念이나 교육 목표는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획일적 색채를 농후하게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부의 시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어용으로 몰리거나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빚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소위 정치 교수로 낙인을 찍히는 고역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잘만 활용하면 교수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教授再任用制가 지금에 와서 민주화라는 바람에 편승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남용되었기 때문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학생에 대한 學事警告와 學事除籍의 제도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의 정신을 살린다면 그 제도를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폐지하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항학열을 높이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면학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일찌기 대학에서 떠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하여서나 국가 사회를 위하여서나 필요한 일일 것이다.

대학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하여서만 유린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의하여 침범되기도 하였다. 총·학장이 일일이 법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주어진 인사권과 재정권이 능락 당하기도 함을 별도로 없이 참아야 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공권력이나 법인에 의하여 대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그것은 대학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자유는 주는 것을 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받은 자유는 소중함을 모르고 빼앗기기가 쉽다. 반면에 쟁취한 자유는 귀중한 것이며 침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권위주의하에서 대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탈환할 의욕도 용기도 없었던 것이다.

한편 자유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자만이 만  
 곱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다. 나  
 만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자유가 허용되는 것  
 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나 아닌 또 다른 나  
 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서도 존재하는 것이며,  
 또 나와 또 다른 나가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하  
 여서도 부여되는 것이다. 학문적 실력과 교육자  
 적 인품 등에 기준을 두면서도 교수 채용에 있  
 어 동문만을 또는 동문을 우선하여 발탁하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경향과 같은 것은 廣求人材의 원칙에서 벗  
 어난 자세요, 대학의 자유의 폭을 스스로 좁히  
 거나 포기하는 思考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  
 우기 대학의 자유가 학내에서의 파벌을 조성하  
 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知性人の 취할 바 태도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의 권  
 위주의하에서의 안일에 젖어서 학내의 질서 유  
 지를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을 기대하는 일이 있  
 다면 이것 역시 대학의 자유를 누릴 자격을 상  
 실한 사고임에 틀림없다.

### 3. 自由와 敎權

교권은 교육의 요체이다. 교권의 확립 없이는  
 교육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교육에  
 성실하게 전념할 수 없으며, 신분에 상응하는  
 보수 없이는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권이 존중되지 않고서는 비록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교실 내외에서 학생을 지  
 도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은 그 강의를  
 믿지 않을 것이요, 지도는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위신이 실추된 강의와 계도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권은 대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자유 있는 곳에서 교권은 존중될 것이요, 대학  
 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곧 교권의 침해에 연결  
 되기 때문이다. 그럴진대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만 사실상 지금까지 교권은 公權力과 정치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많은 침  
 해를 받아왔다. 그뿐 아니라 학부형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6·29 선언을 전후하여서부터는 심

지어 일부 학생들로부터도 극한적인 침해를 받  
 는 형편에 이르렀다. 한편 정치로부터의 침해  
 는 과거에는 주로 輿圖에 의하여 자행되었지  
 만, 근자에는 野蠻으로부터의 침해가 노골화되  
 기도 한다. 말하자면 교권은 동네의 북이 된 형  
 편이다.

우리나라의 교권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그단  
 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두방할 것이다. 즉 우리  
 는 오랜 세월을 儒敎的 傳統 속에서 살아왔다.  
 儒家에서는 君師父一體라고 하여 스승을 지극하  
 게 존경하고 대접하는 풍토를 만들어 지켜왔다.  
 다시 말해서 교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었던 것  
 이다.

일제하에서도 그랬고 광복 후의 권위주의하에  
 서도 그랬는데 체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는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 이외의 경  
 우에는 교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유  
 교적 전통하에서는 교권은 과잉 보호를 받은 셈  
 이다.

마치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아 자란 자녀가  
 그렇듯이, 교권도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유교 전통  
 은 퇴색하고 근대화의 물결과 더불어 서양의 권  
 리 개념이 도입되고, 따라서 침해 상태가 야기  
 되는 경우에 그것에 저항하고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서 야기되는 현  
 상이라고 하여 두방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  
 은 다른 직업 분야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직업 분야는 처음부터 과잉 보호 없이 강  
 한 방어력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길이 트였고 자유가 존중되기에 이  
 른 오늘에 의서는 교권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침해에 대하여는 추호의 양  
 보도 없는 자기 방어의 능력을 갖추고 발휘하  
 야 한다. 자체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있어야 할 본  
 케도에 올려 놓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이다.

교권은 권리의 일종이다. 그것은 서양에서 반  
 아들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의무를 수반한다.  
 권리의 완전한 주장과 수호를 위하여는 그것에  
 따르는 의무의 이행이 따라야 한다. 즉 교권을

그 행사와 그것에 대한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교권 수호에 무력했음을 깊이 반성함과 아울러 교육자로서의 의무의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타적업과는 달리 대가가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우리나라의 대학 풍토에 안주하려는 자세로는 교권은 권리로서의 힘을 완전하게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자로서의 업적을 창출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수업에 충실하고 학생 지도에 적극적이며 성실성으로 대할 때에 비로소 교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될 수 있는 것이다. 지꾸로 말하여서 모든 압력에 대하여 左顧右盼 護身에 급급하거나, 오히려 그 부당한 압력에 접근하여 환심을 사려는 자세를 취하는 한 교권은 보호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동시에 교육자는 事物 판단의 가치 척도를 오로지 교육적 입장에만 두는 순수성을 견지할 때에 교권은 확고부동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교육 이외의 가치 척도, 특히 정치라든가 물질 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면 교권의 수호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 4. 自由·敎權과 責任

대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학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이다. 교권은 수호되어야 한다.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임무에 전념하기 위하여서이다.

광복 후 40년 동안 대학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비롯하여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성장에 절대적 기여를 하여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학의 생명인 자유는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교육의 관건인 교권은 슬한 침해를 겪어 왔다.

만일 이 제약과 침해를 받지 않고 대학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활달하게 교육을 할 수 있었다면 개인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좀더 비약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리라고 확신한다. 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人間敎育은 더 훌륭하게 이룰 수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비록 産業社會化에 따른 보편적 부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오는 윤리 부

재의 현상은 훨씬 감소되었으리라고 돌이켜 본다. 전통적 문화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능력과 자질을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이 자체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大學 外的 要因에만 돌릴 생각은 없다. 자유와 교권은 그 주체인 대학 내지 大學人 자체가 한사코 지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외부적 요인에 탓이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권위주의하에서 대학은 자유에 제약을 받으면서 또 교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도 問責만은 당하여 왔다. 정부로부터 그랬고 학생들로부터 그랬다. 또 사회적 여론으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와 교권은 반신불수였는데 책임만은 온전하게 져야 한다고 채적질 당하여 왔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大學人이요 敎育者이기에 과거의 위대한 학자와 스승과 선비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쳐보는 현명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자유에 결함이 있고 교권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결함과 하자를 제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반성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앞으로나마 외부의 부당한 힘에 의하여 자유가 침식 당하고 교권이 저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와 교권은 본래의 있어야 할 모습대로 향유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유의 실천과 교권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엄연한 원리를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자유의 구가는 자칫하면 무절제한 방종에 흐르기가 쉽다. 특히 대학 사회에는 일종의 특권 의식이 만연되어 있어 政權 아닌 國權에, 政體 아닌 國體에 도전하는 것마저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은 우리가 깊이 삼가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는 한 대학의 자유는 또다시 침해 당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로서의 의무의 이행을 제쳐놓은 권리의 행사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교권의

구사는 남용의 누명을 쓰고 교육을 그르칠 것이다. 사랑없는 배가 반감과 원한만을 결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심해지면 교권은 침해의 전철을 다시 밟는 원인을 만들 것이다.

4·19 직후 민주당 정권에 걸쳐 자유의 봄은 이 땅에 찾아오는 듯하였다. 대학생이 주체였었기에 자유의 꽃 봉오리는 대학에서 가장 탐스럽게 피어났었다. 그러나 그것이 미처 피어보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고만 데는 그 책임의 일부가 대학이 자유의 울타리를 넘어선 데도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10·26 후의 '80년의 봄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6·29가 가져온 자유의 봄은 꽃을 활짝 피게 할 서광을 비쳐주고 있다. 정부도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몸에 젖어 있는 권위주의의 체질을 하루 아침에 깨끗이 청산하기가 무척 어려운 듯이 보이는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에 책임을 지워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편세에 대한 미련을 남김없이 버리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권력의 그늘 밑에서 안일을 즐기려는 타성을 버리고 자기 책임하에 자유를 확보하려는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교수는 회복된 자유에 도취하여 분에 넘치는 무책임한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어용의 누명으로 위협하는 어떠한 압력에 대하여서도 단호히 교권을 지키려는 의연한 태도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특히 이른바 운동권에 속하는 경우, 자유화를 부르짖으면서 자유화에 역행하는 자기 모순의 행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와 교권을 다시는 유린당하지 않고 영구히 대학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다.

## 5. 맺는 말

대학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교육이 있는 곳에는 교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 후 40년간 자유와 교권을 완전하게는 누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주로 公權力에 의하여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을 전적으로 公權력에만 미룰 수는 없다. 그것을 수호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였던 대학에도 허물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의 자유를 만끽하고 교권을 여지없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내외를 막론하고 대학의 자유와 교권을 다시는 침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유와 교권의 주체인 대학 당국과 교수 및 학생들이 자유와 교권을 결지하기에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침탈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인등을 삼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침해 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回收하려는 마음의 각오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